

여론조사꽃 제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3_05

ARS+CATI

제30차 ARS조사

제15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제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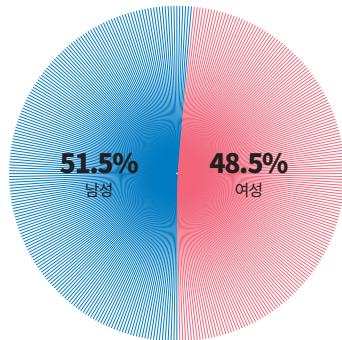
ARS & CATI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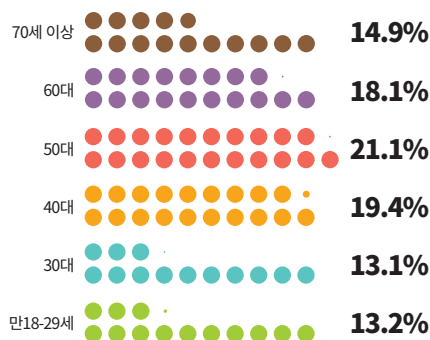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3.5% [총 통화시도 28,650명]
조사기간	2023년 3월 24일 ~ 3월 25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전체		1,004	100.0%	1.00
	남성	517	51.5	498	0.96
연령	여성	487	48.5	506	1.04
	만18~29세	133	13.2	166	1.25
	30대	132	13.1	151	1.14
	40대	195	19.4	183	0.94
	50대	212	21.1	196	0.92
	60대	182	18.1	170	0.93
지역	70세 이상	150	14.9	138	0.92
	서울	197	19.6	189	0.96
	인천·경기	317	31.6	320	1.01
	대전·세종·충청	110	11.0	105	0.95
	광주·전라	100	10.0	98	0.98
	대구·경북	93	9.3	98	1.05
	부산·울산·경남	146	14.5	150	1.03
	강원·제주	41	4.1	44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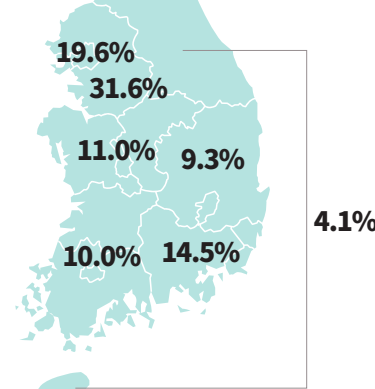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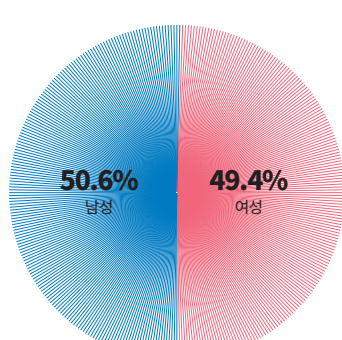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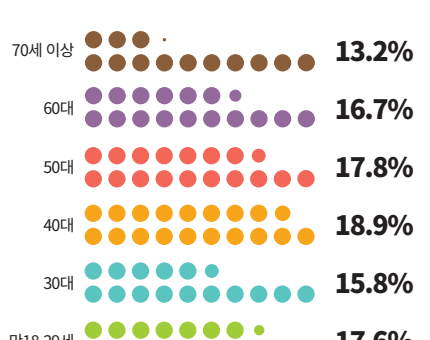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2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5.5% [총 통화시도 6,607명]
조사기간	2023년 3월 24일 ~ 3월 25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전체		1,024	100.0%	1.00
	남성	518	50.6	508	0.98
연령	여성	506	49.4	516	1.02
	만18~29세	180	17.6	170	0.94
	30대	162	15.8	153	0.94
	40대	194	18.9	189	0.97
	50대	182	17.8	199	1.09
	60대	171	16.7	172	1.01
지역	70세 이상	135	13.2	141	1.04
	서울	192	18.8	193	1.01
	인천·경기	324	31.6	326	1.01
	대전·세종·충청	109	10.6	108	0.99
	광주·전라	100	9.8	99	0.99
	대구·경북	95	9.3	100	1.05
	부산·울산·경남	162	15.8	153	0.94
	강원·제주	42	4.1	45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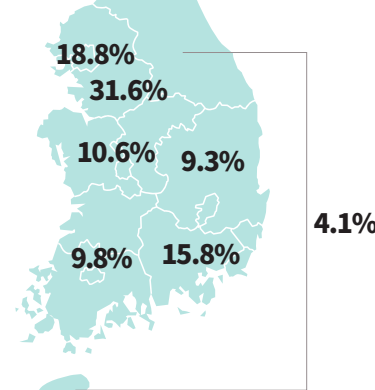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여론조사꽃 제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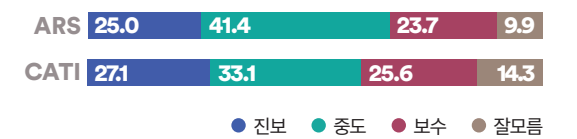
ARS & CATI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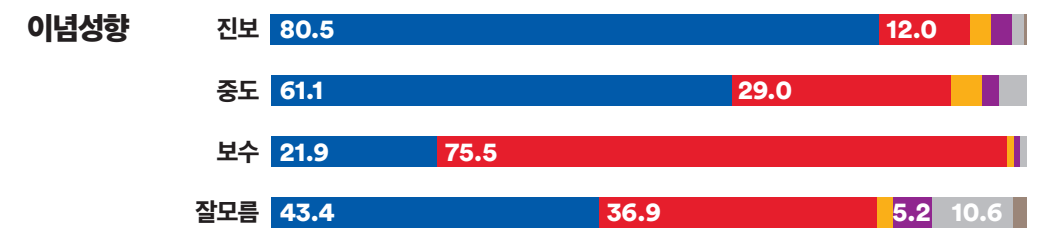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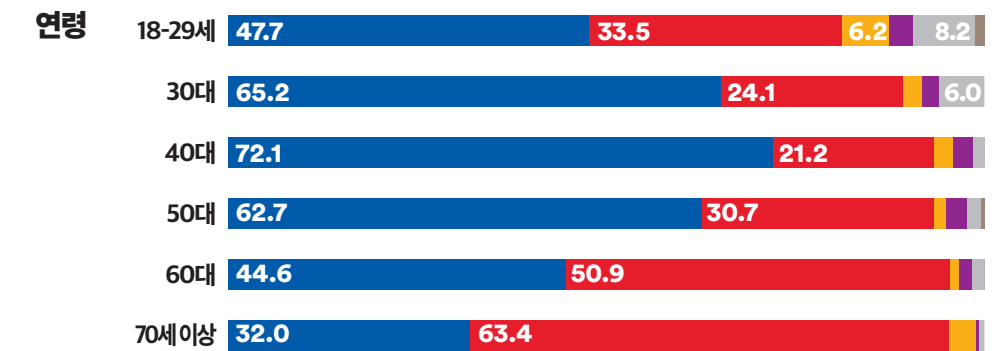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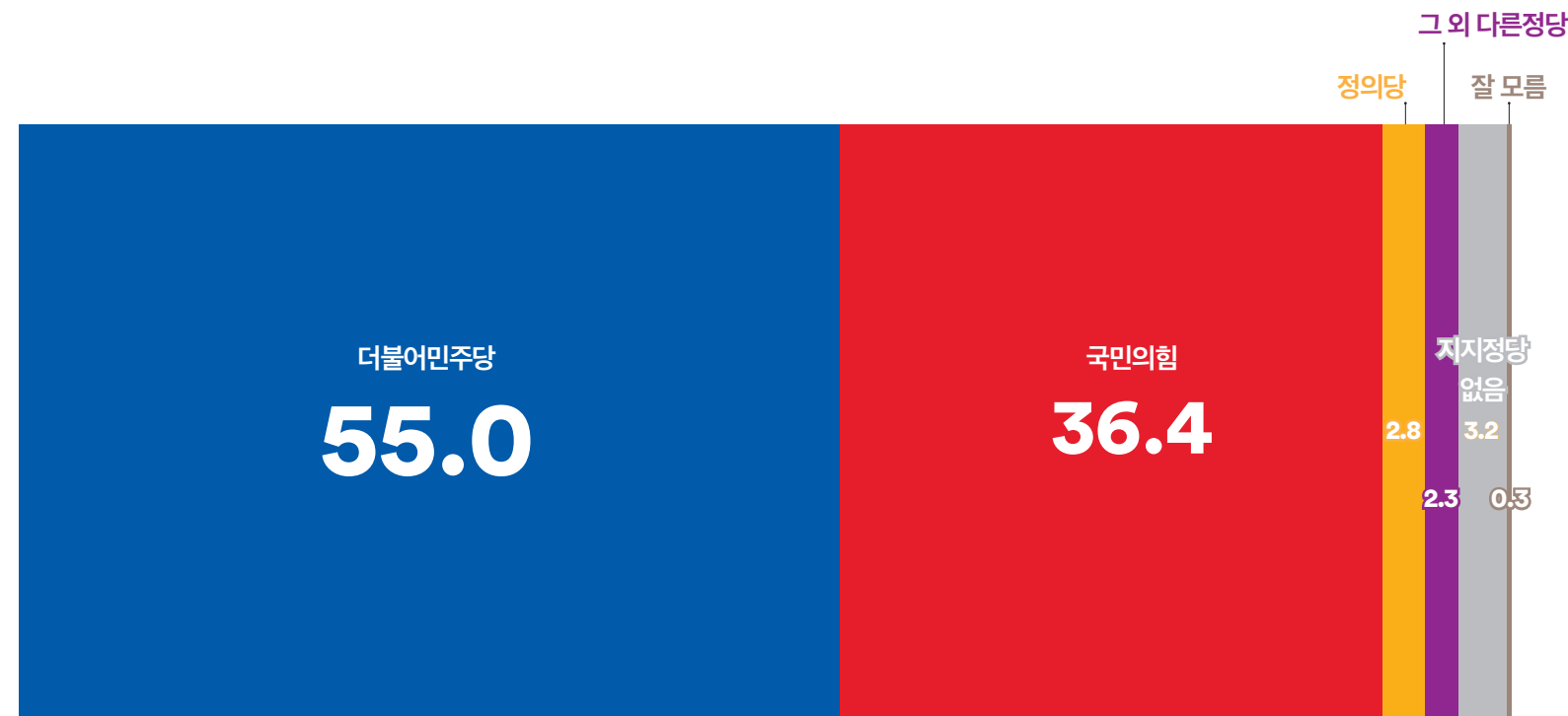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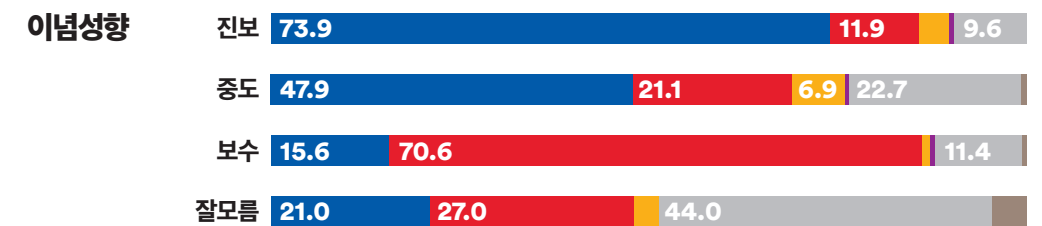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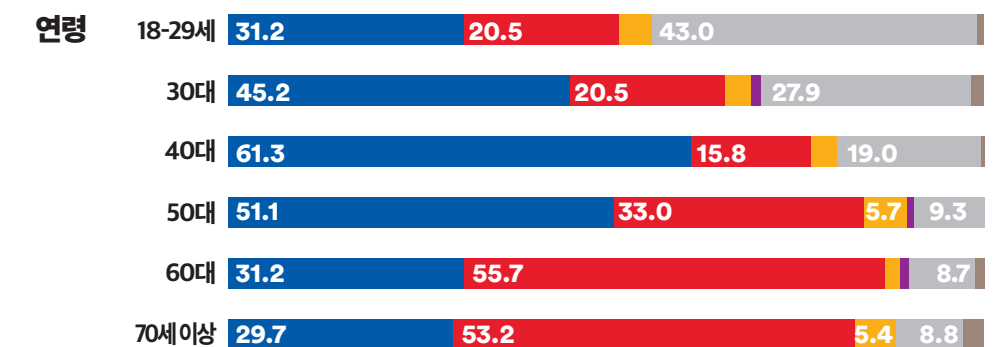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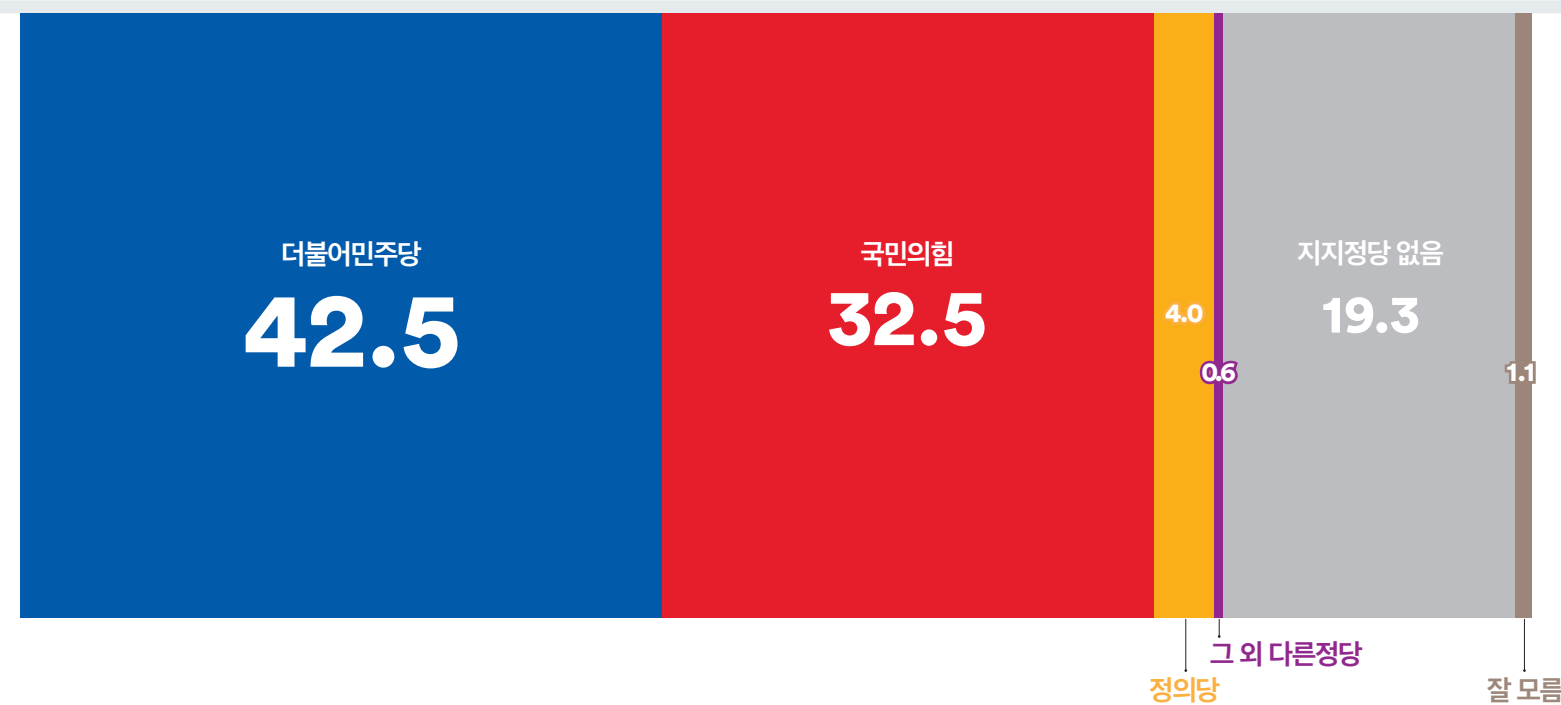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5%p 상승, 국민의힘 0.7%p 하락(격차 18.6%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7%p 하락, 국민의힘 2.5%p 하락(격차 10.0%p)

두 조사 모두 양당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으며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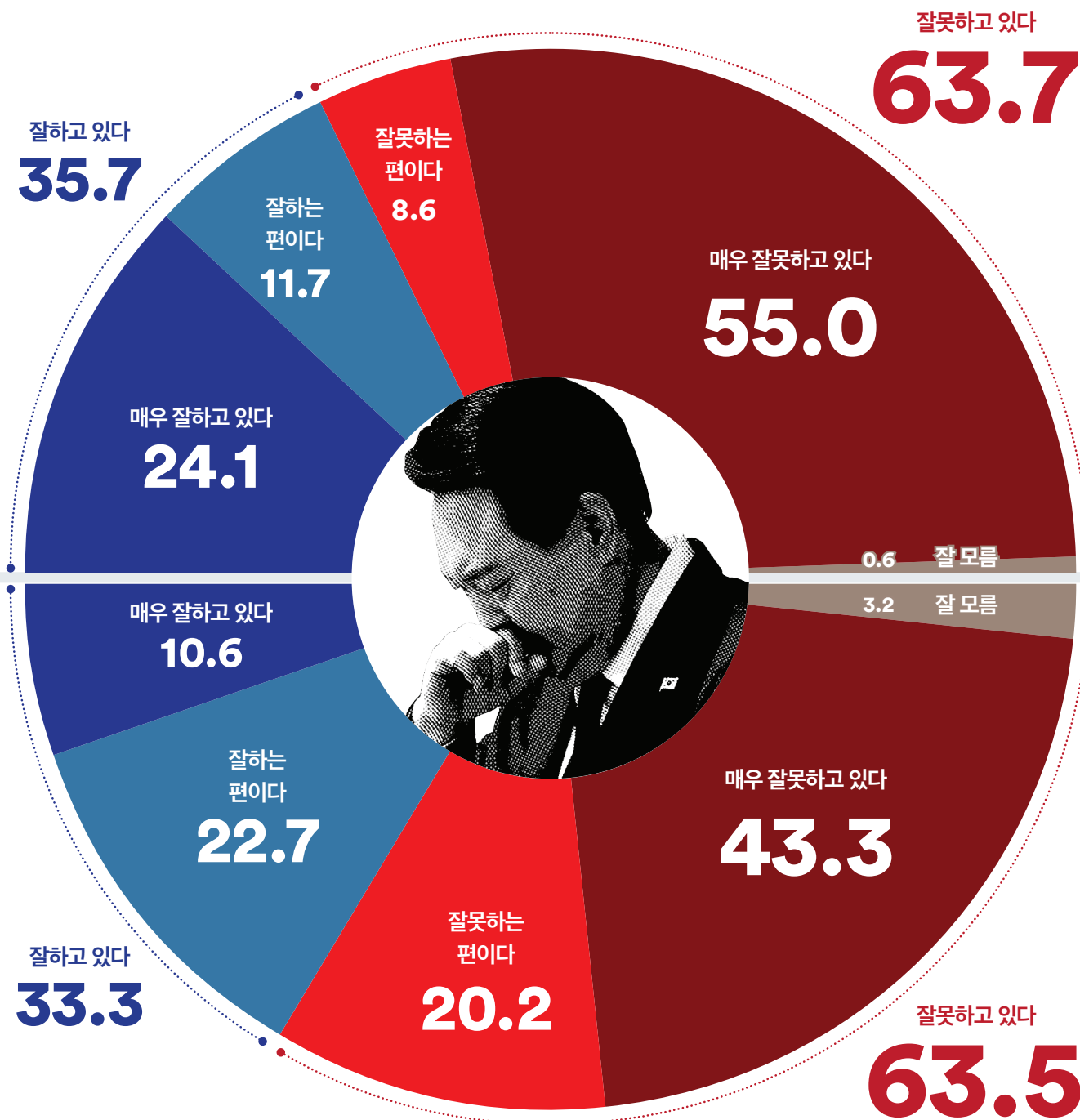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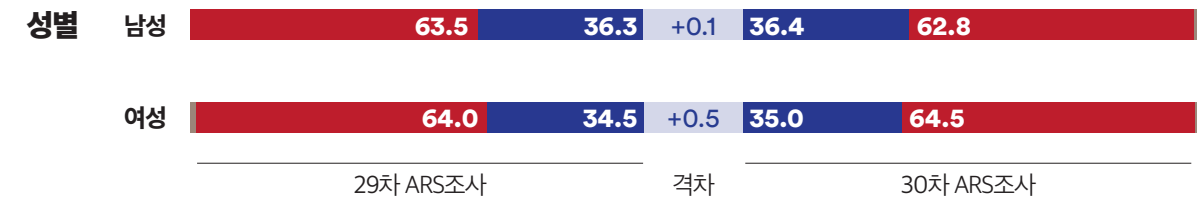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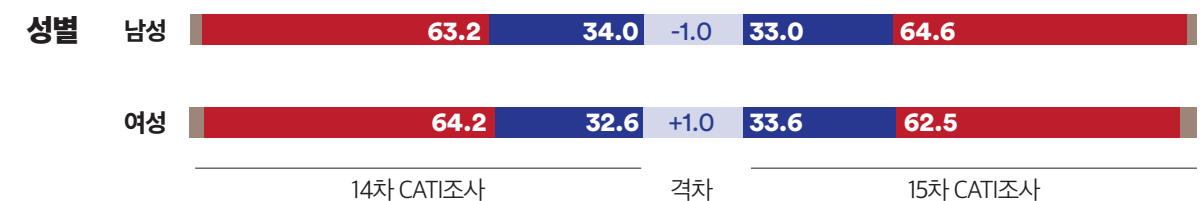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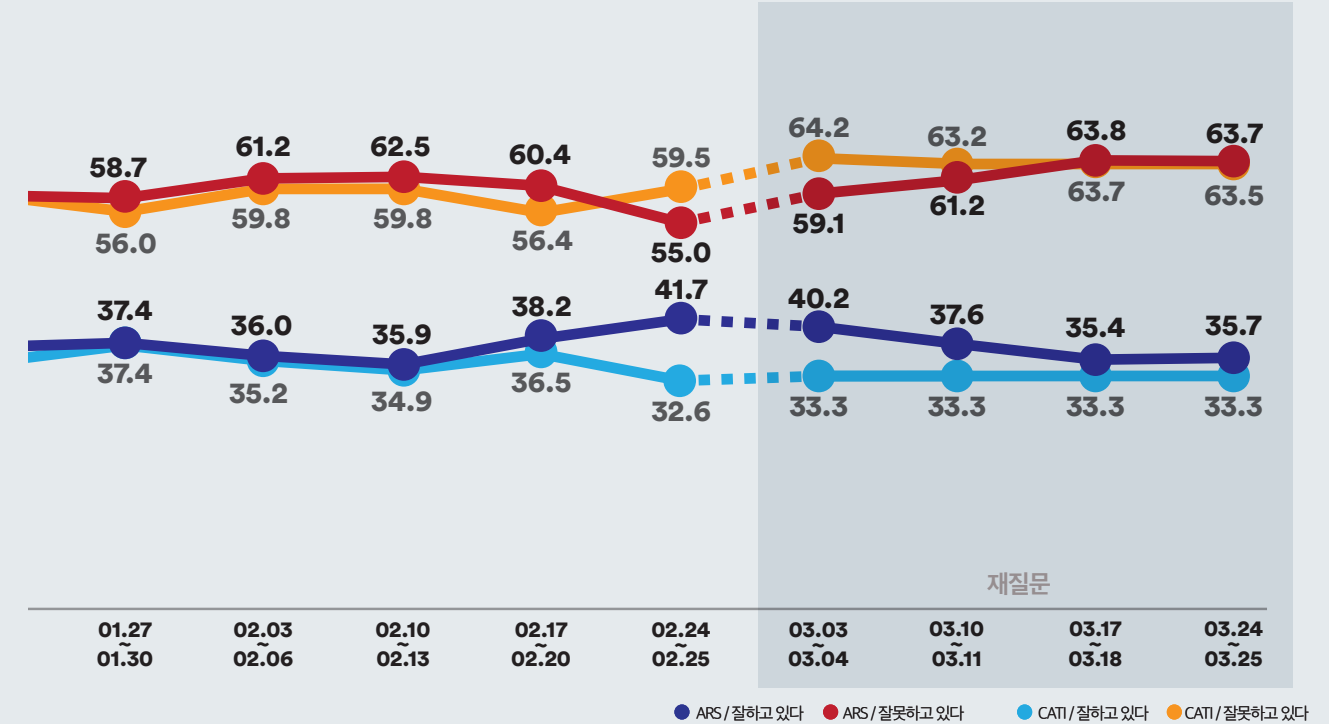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0.3%p증가, 부정평가 0.1%p 감소 (격차 28.0%p)
 지난 CATI 조사 대비 부정평가 0.2%p 감소 (격차 30.2%p)
 두 조사 모두 진보층·중도층은 부정 평가 우세, 보수층은 긍정 평가가 우세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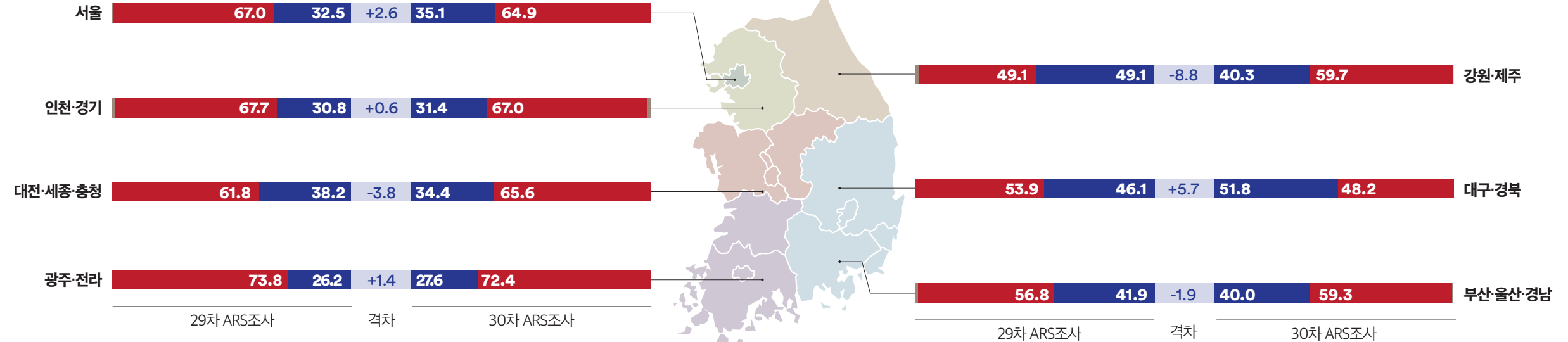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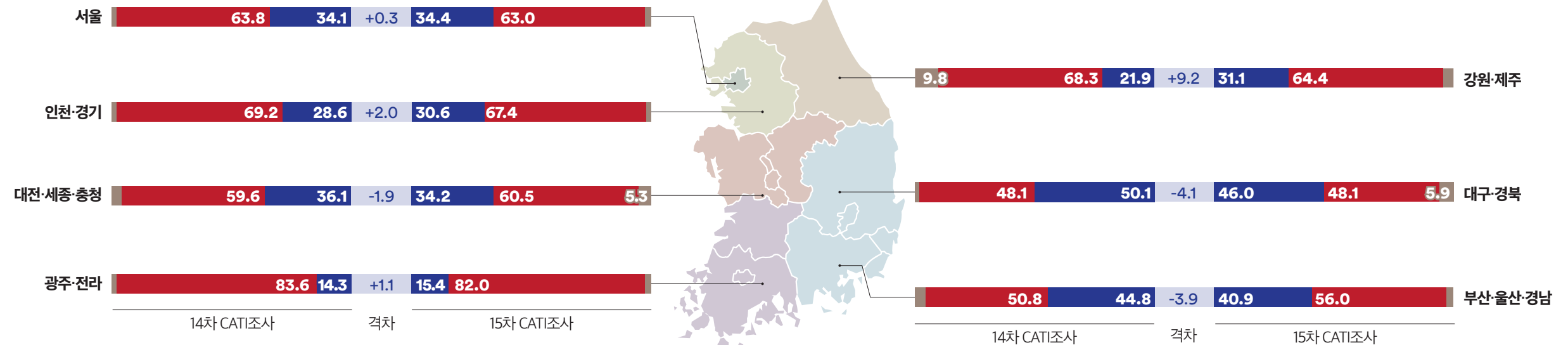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격차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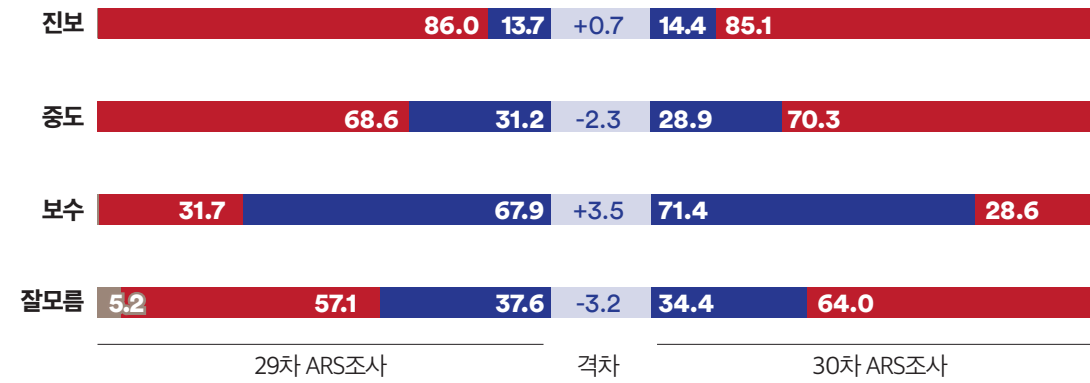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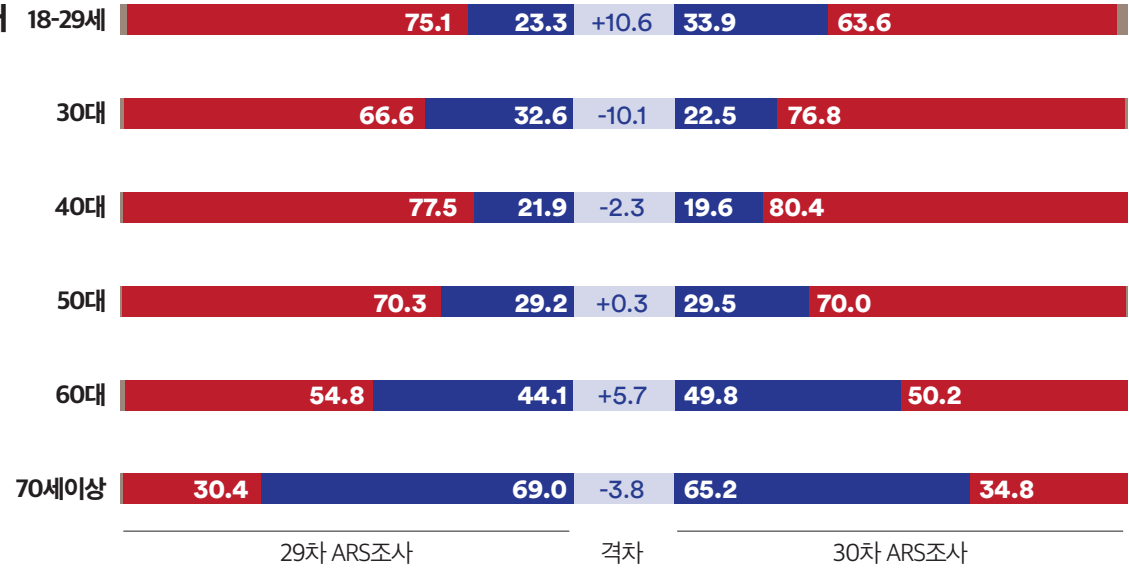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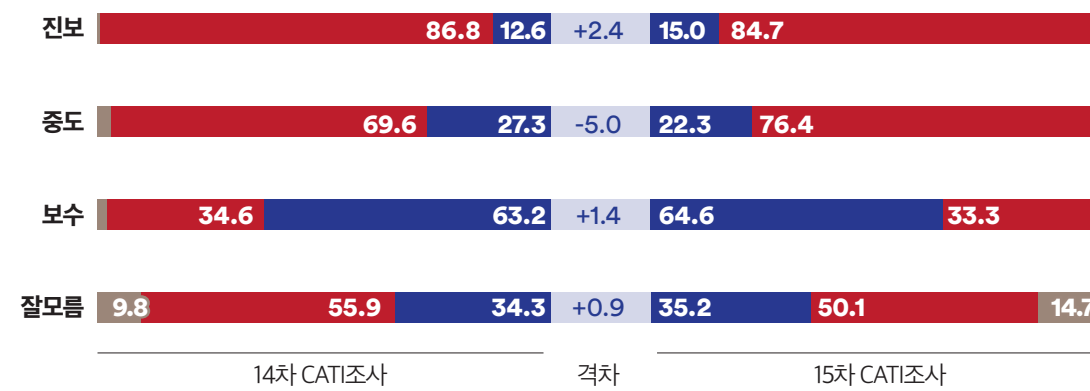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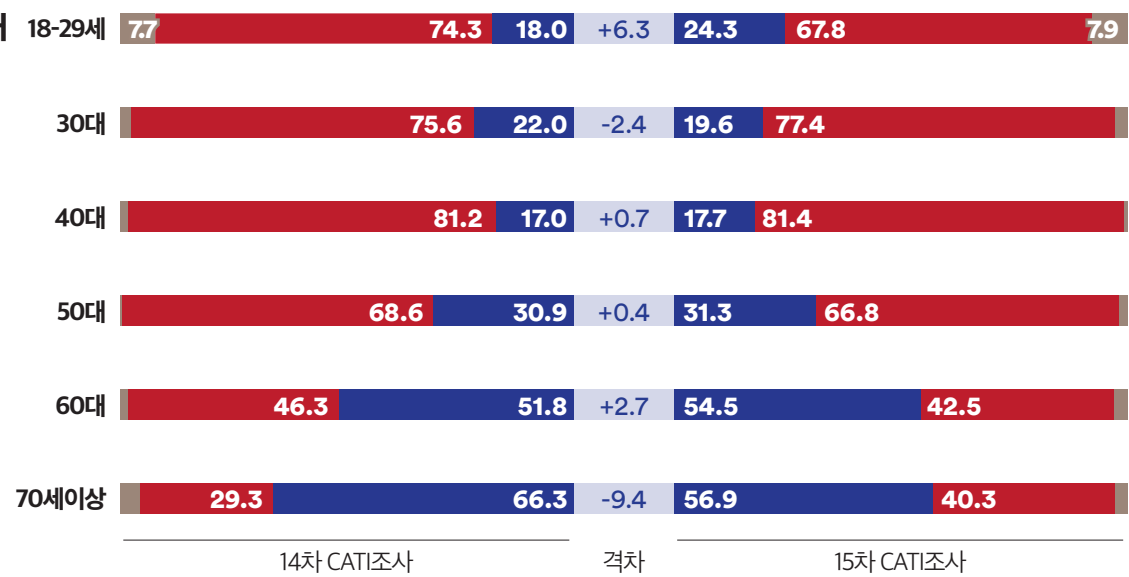


CATI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한일 정상회담 • 독도의날

ARS & CATI / CATI

정치·사회 현안	윤 정부의 대일 접근 방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들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필요성
	반일정서로 이득을 취하는 세력
	외교 책임자 총사퇴
	일본 소부장 기업 용인 유치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윤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먼저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이 호응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반일정서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다.”,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정부의 대일 접근방안이 적절한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본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언급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책임자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도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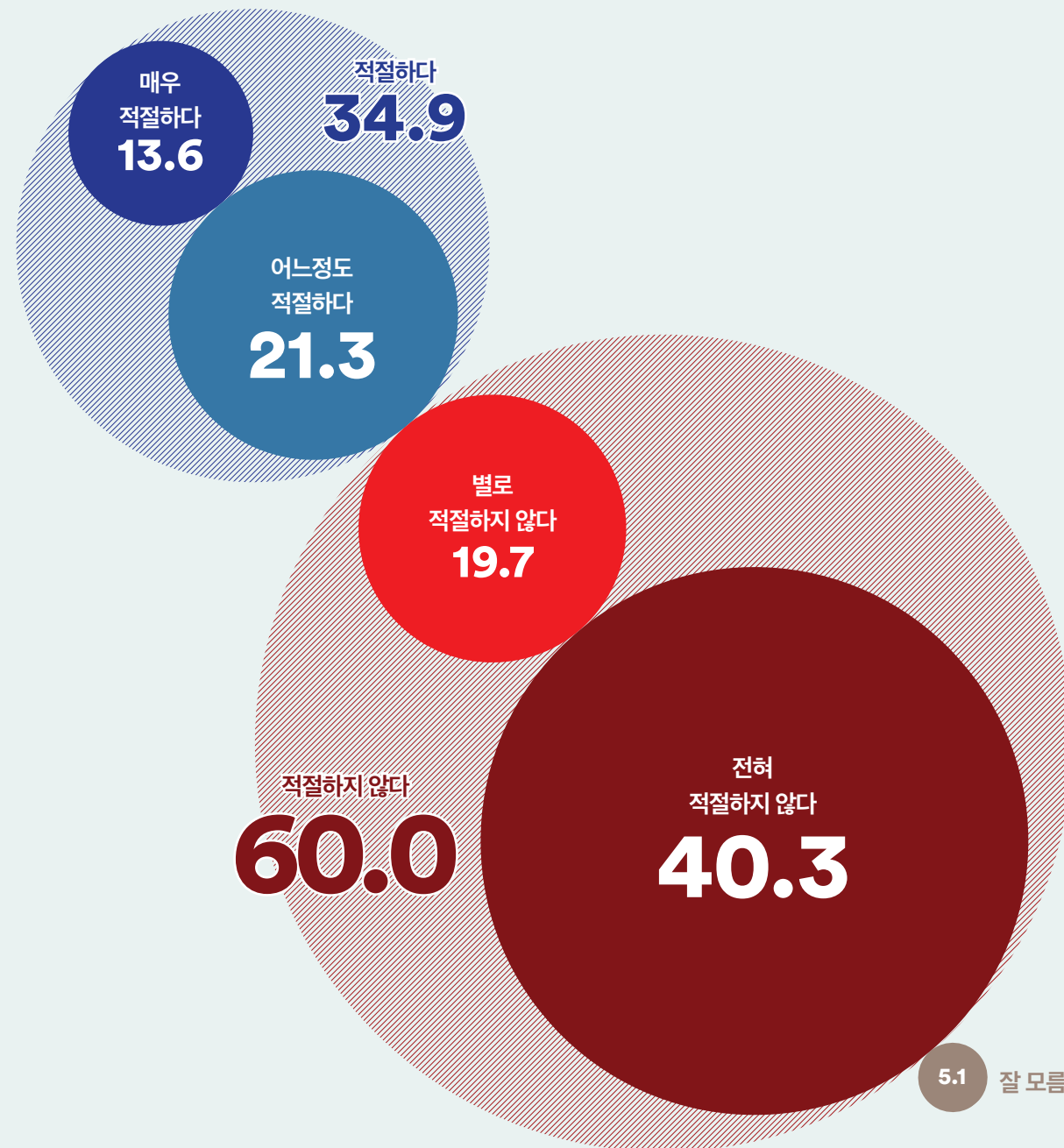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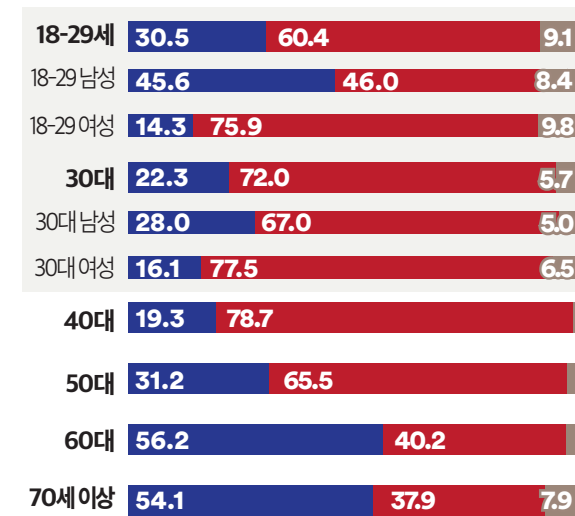
윤 정부의 대일 접근 방안

Q.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간다면 일본이 호응해 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일 접근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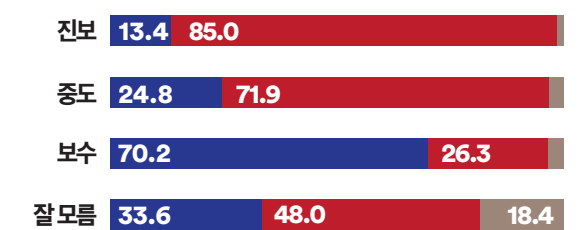


10명 중 6명은 ‘우리가 먼저 걸림돌을 제거해 일본의 호응을 얻겠다는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부적절’ 응답이 앞섰으며, 특히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부적절’ 의견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부적절’ 응답이 우세, 60대 이상과 보수층은 ‘적절’하다는 응답 우세
무당층(부적절 62.7%)과 중도층(부적절 71.9%)에서도 ‘윤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인식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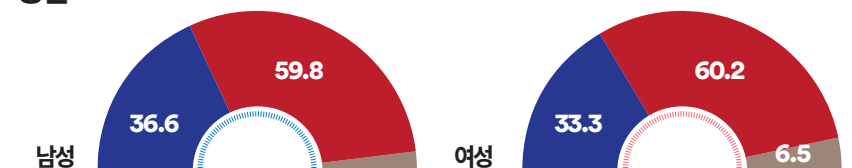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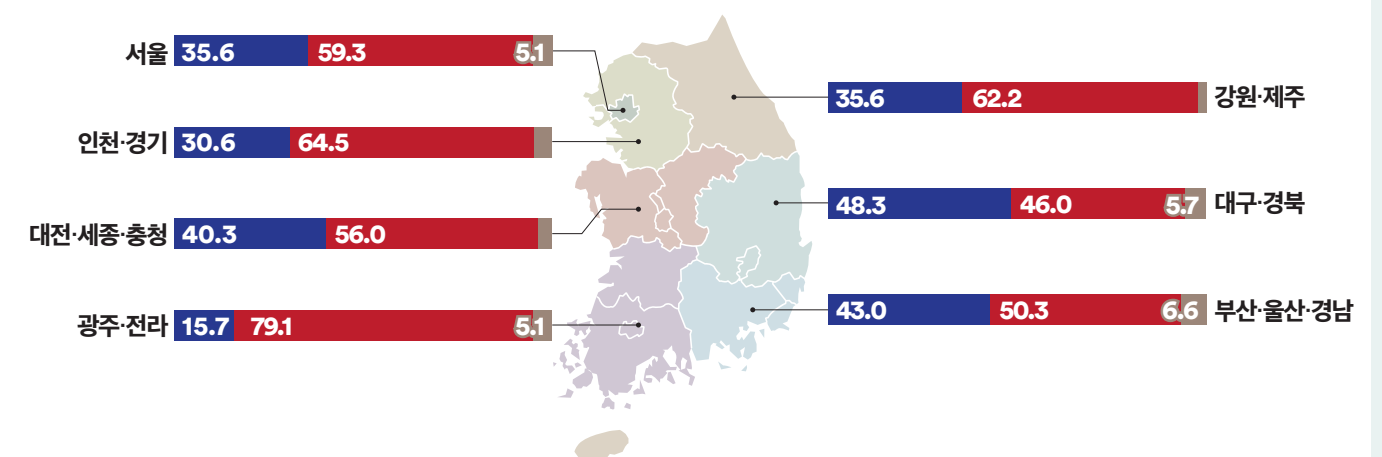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잘 모름



정치·사회 현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들

Q.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고 보도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에 독도·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이 실제로 언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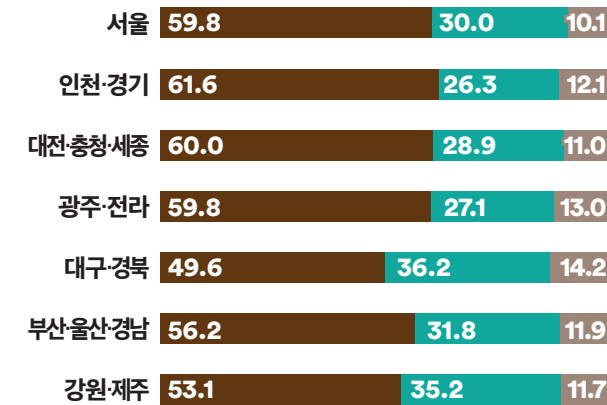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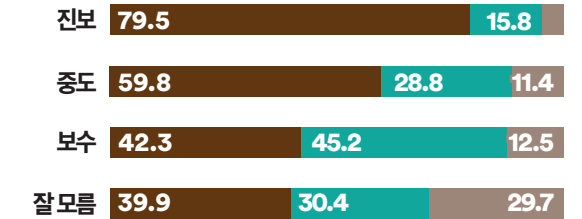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독도·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이 실제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언급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앞섬
무당층: ARS(그렇다 40.4% / 그렇지 않다 35.1%), CATI(그렇다 47.6% / 그렇지 않다 32.2%)
중도층: ARS(그렇다 59.8% / 그렇지 않다 28.8%), CATI(그렇다 54.6% / 그렇지 않다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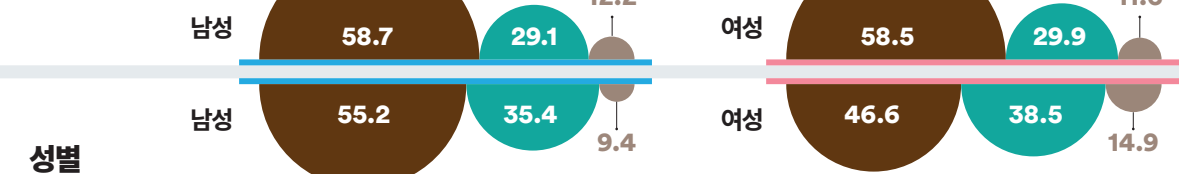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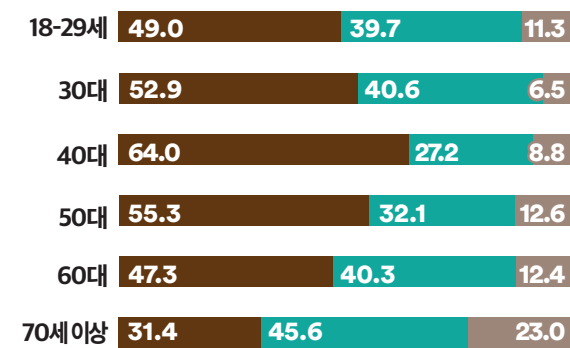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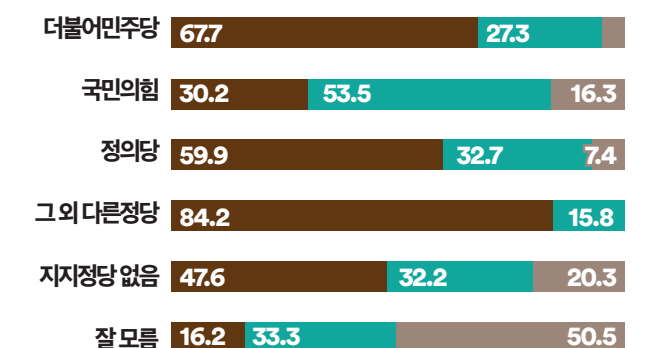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언급했을 것 언급하지 않았을 것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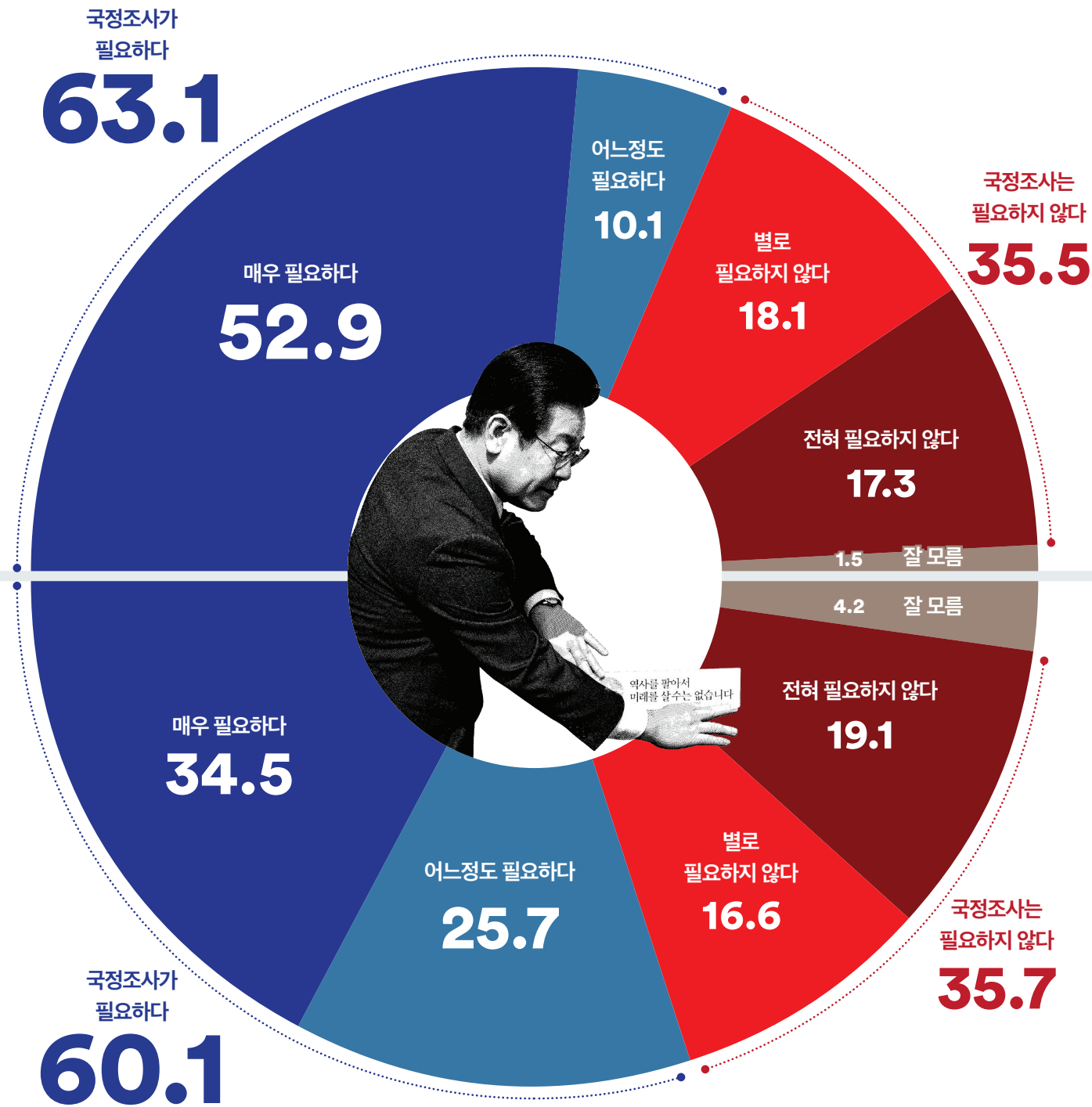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한일 정상회담 국정 조사 필요성

Q. 일본 언론이 보도한 독도 영유권,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한일 정상회담 관련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국정 조사를 주장합니다.
국정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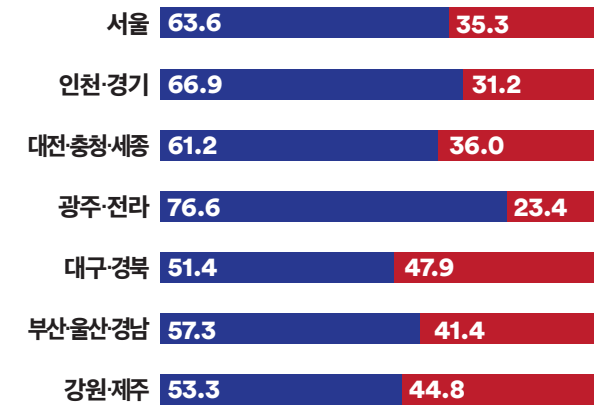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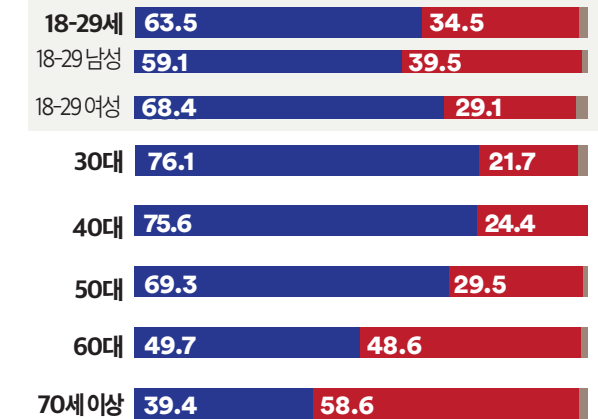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 회담에 대한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
50대 이하 응답층은 '필요하다'는 응답 우세, 70세 이상 연령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중도·무당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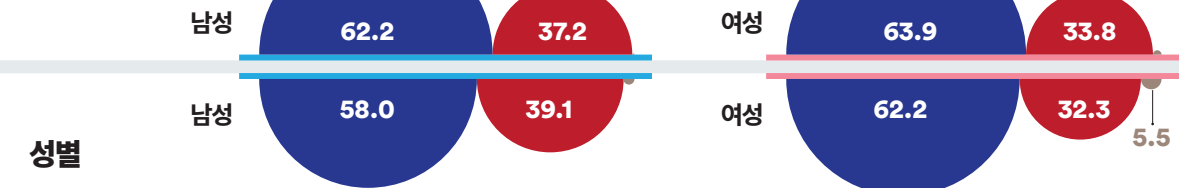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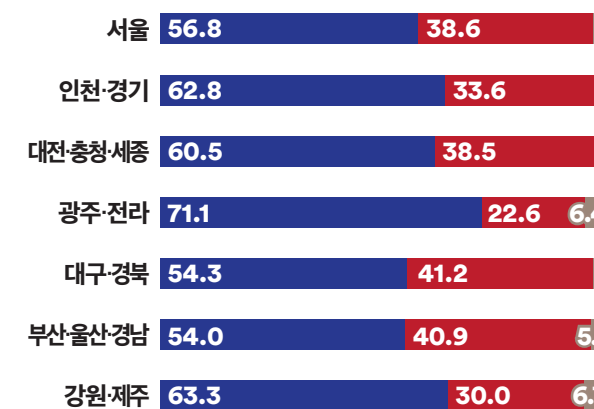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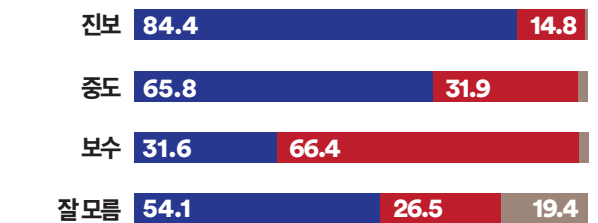
성별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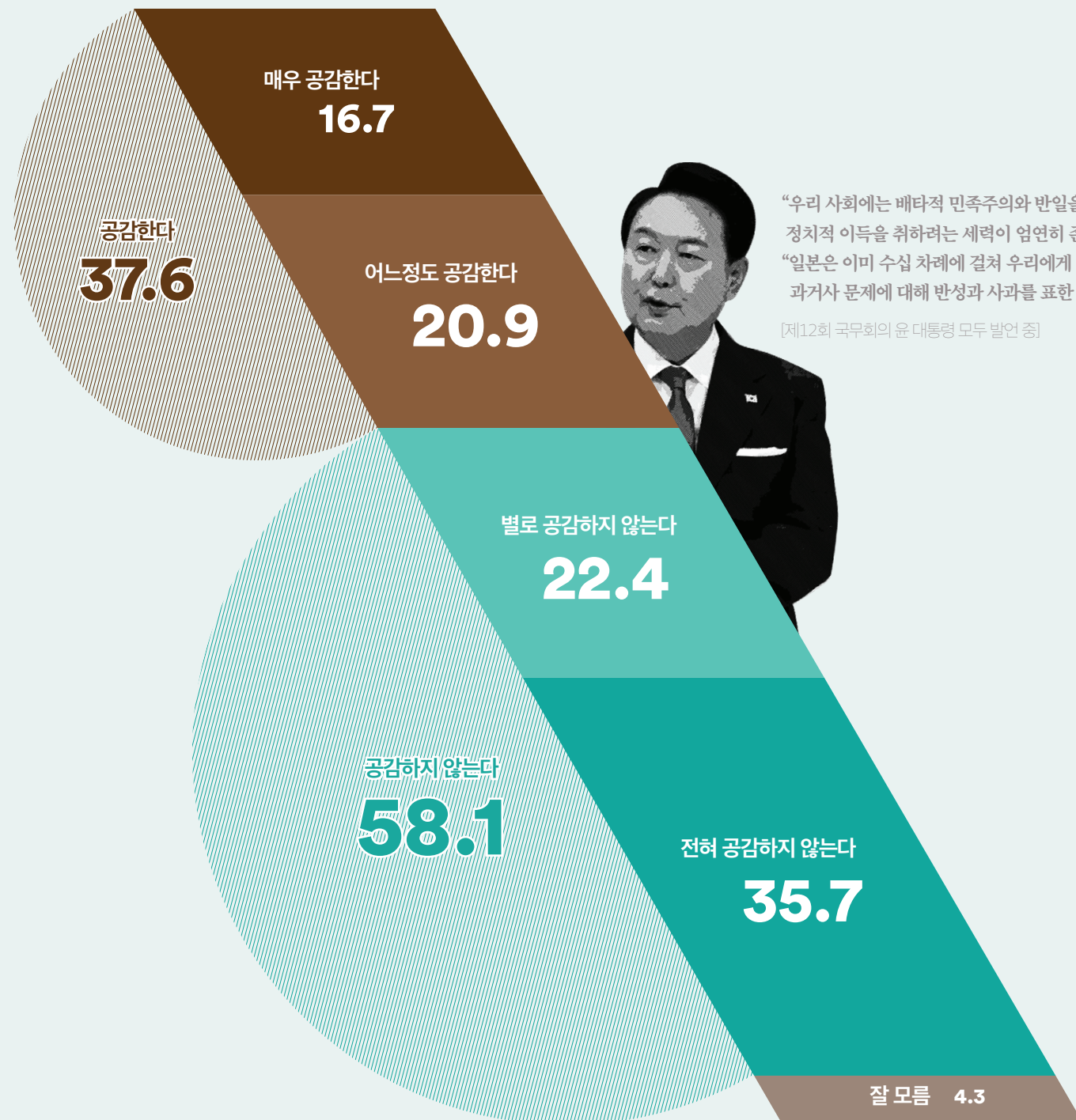


국정조사 필요 (Blue), 국정조사 불필요 (Red), 모르겠다 (Grey)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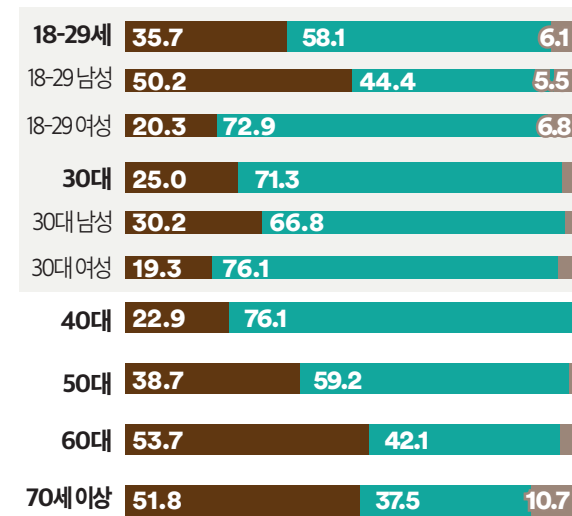
반일 정세로 이득을 취하는 세력

Q. 윤 대통령은 한일회담에 대한 국내 비판에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대응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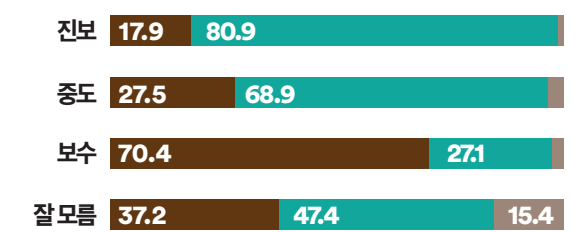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공감한다'는 응답 대비 우세(격차: 20.5%p)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앞섰으며, 특히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우세, 70대 이상과 보수층은 '공감' 응답 우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비공감 92.9%), 국민의힘 지지층(공감 83.6%)로 상반된 결과를 보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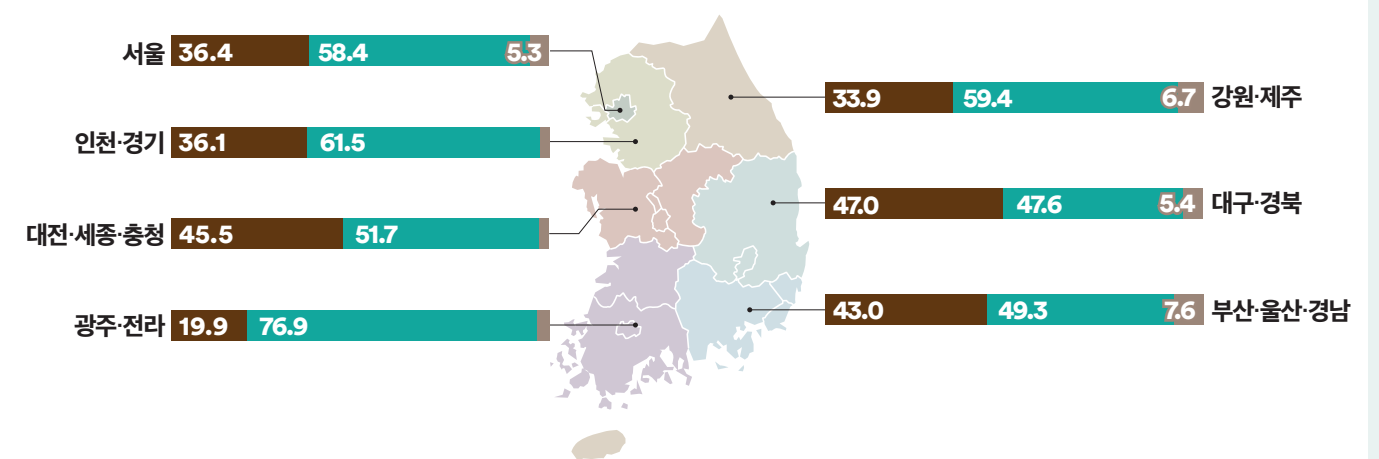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외교 책임자 총 사퇴

Q.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매국 외교라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차장 등 외교 책임자들의 총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과 ‘사퇴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림

40대·50대는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 60대·70세 이상에서는 ‘사퇴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우세

무당층은 ‘사퇴해서는 안된다(37.7%)’는 의견이, 중도층은 ‘사퇴해야 한다(49.3%)’ 의견이 소폭 더 많음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중]

“외교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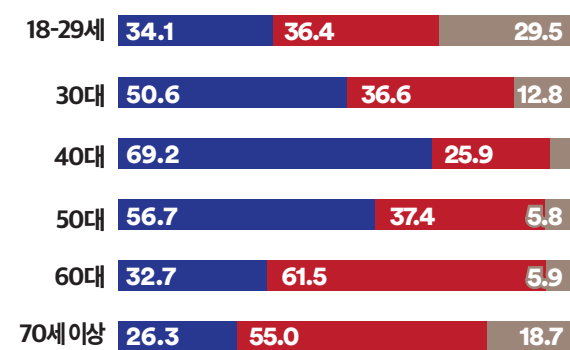
사퇴해야 한다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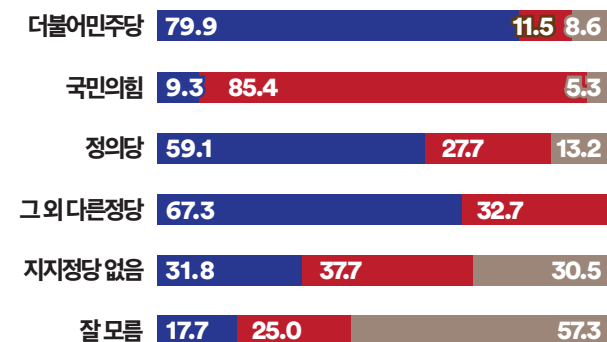
사퇴해서는 안된다
41.5

잘 모름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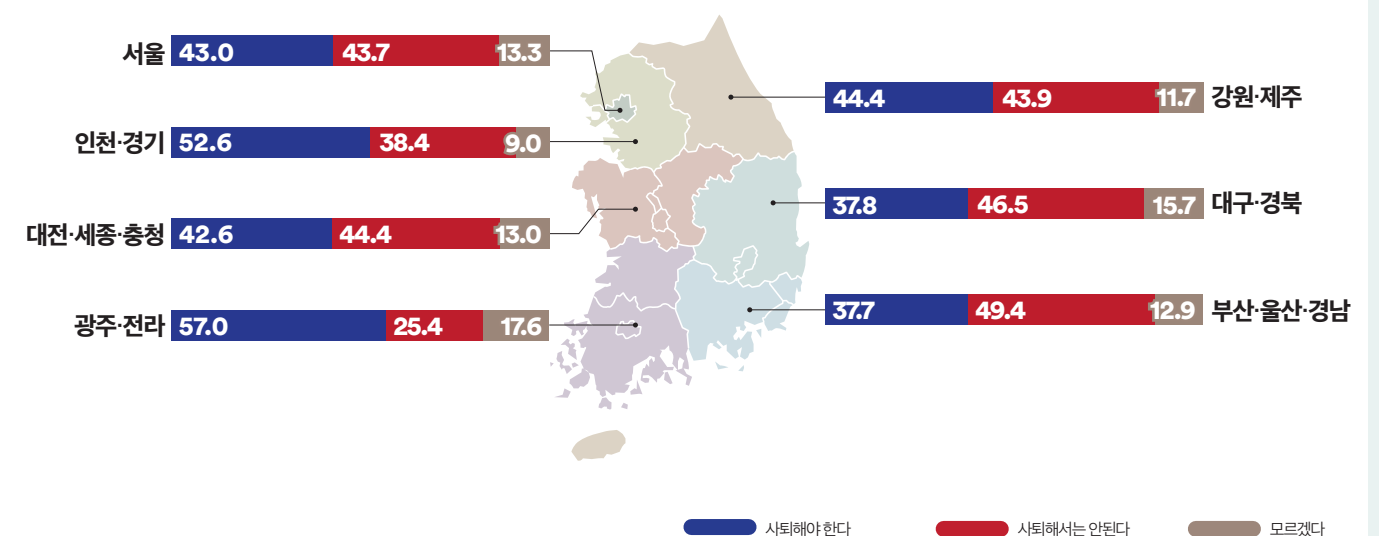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권역



정치·사회 현안

일본 소부장 기업 용인 유치

Q. 전기차 배터리·반도체 소재·자동차 부품과 같이 우리 산업에 뿌리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일본 소부장 업체를 용인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한 다음 두 의견 중 무엇에 공감하십니까?

ARS



“한일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12회 국무회의 윤 대통령 모두 발언]

국내업체를 육성하는 대신
일본업체를 지원하는
친일 행위

53.8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조치

36.5

잘 모름
9.7

CATI

국내업체를 육성하는 대신
일본업체를 지원하는
친일 행위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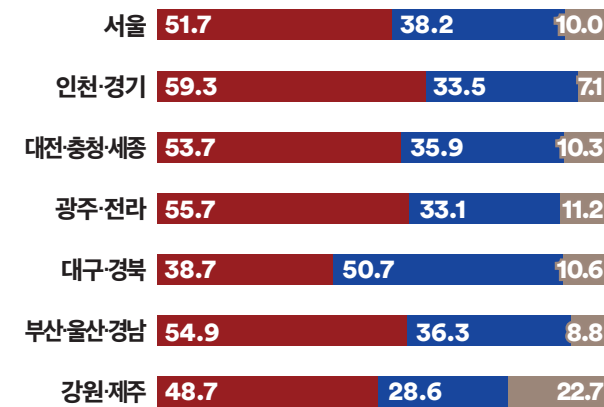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조치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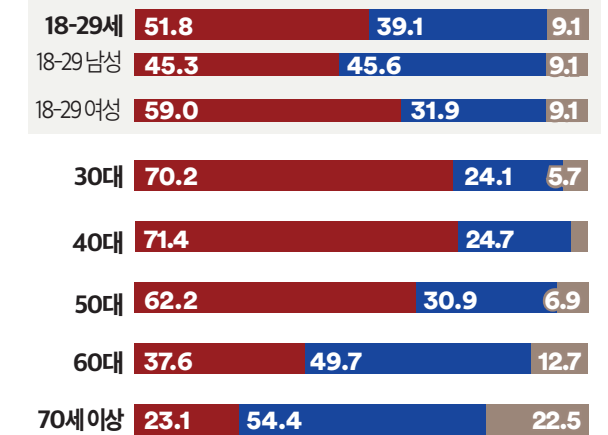
잘 모름
12.7

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이상은 윤 대통령의 일본 ‘소부장’기업 유치 발언이 ‘친일 행위’라 인식
 TK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 및 모든 성별에서 ‘친일 행위’란 응답이 앞섬
 30~50대와 중도층·무당층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친일 행위’란 의견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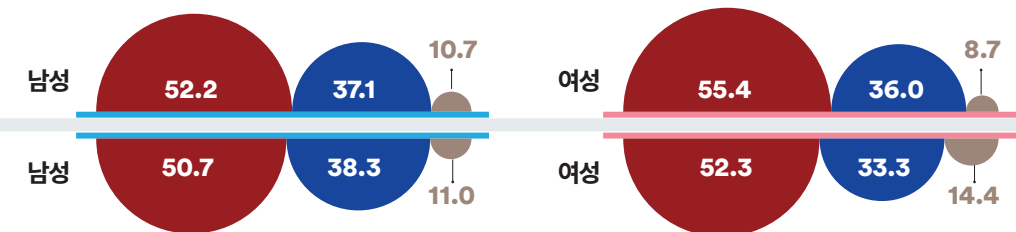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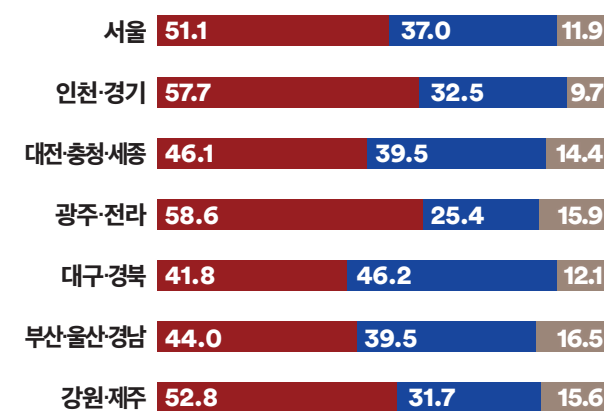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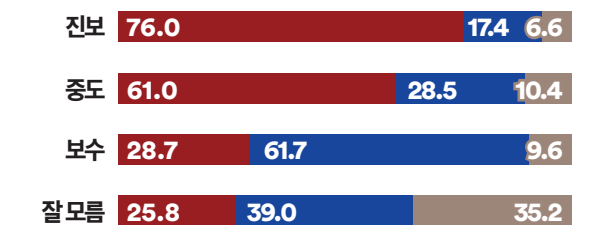


성별

권역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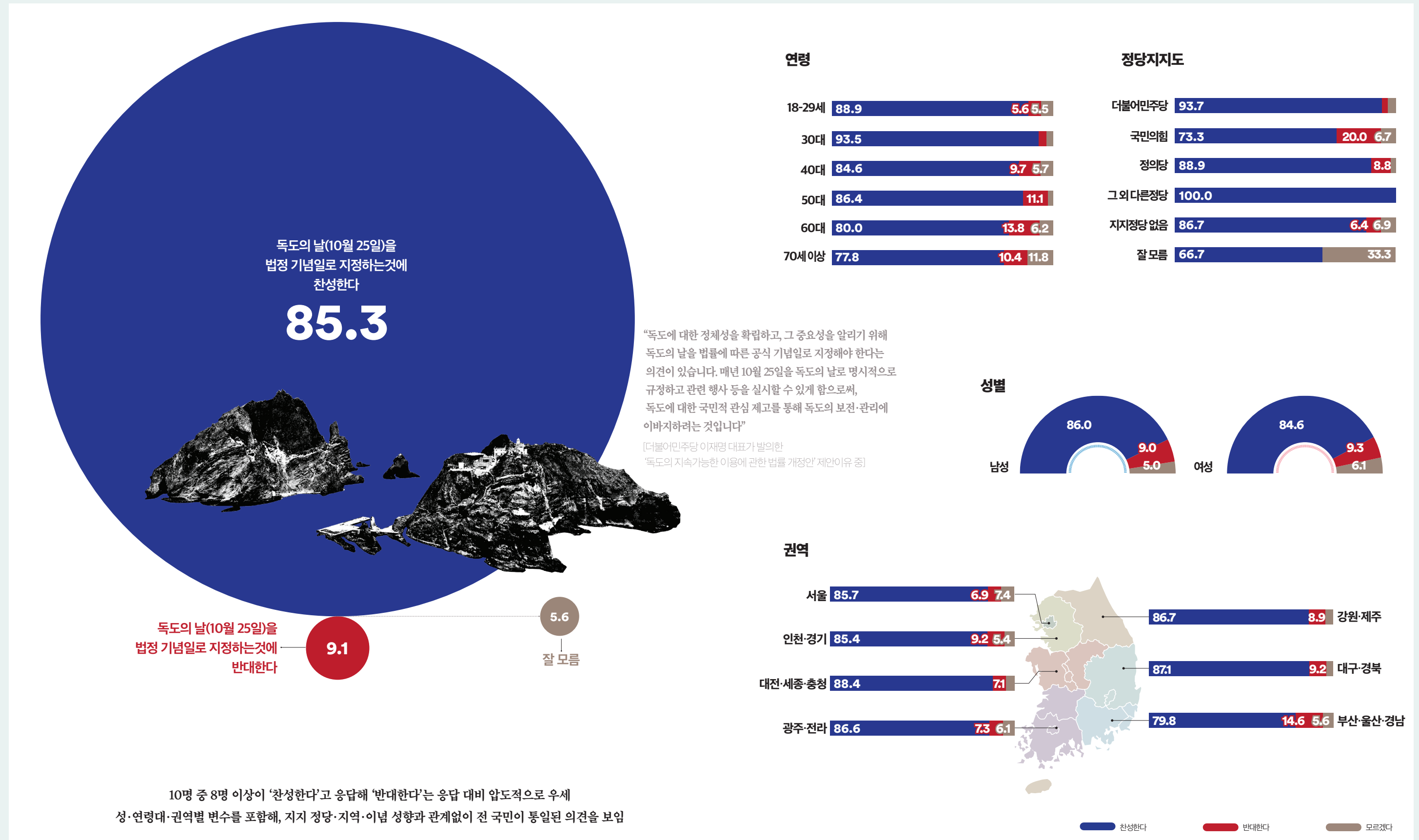


친일행위 경제적 조치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Q. 10월 25일을 법률에 따른 독도의 날로 공식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꽃 제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근로시간

ARS & CATI / CATI

정치·사회 근로시간 관련 대통령실의 혼선
현안 주 4.5일제 도입 찬반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다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36시간 근로, 즉 주4.5일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고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근로시간 관련 대통령실의 혼선

Q.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에 상한선을 두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다음 두 의견 중 무엇에 더 공감하십니까?

의사 소통상의
단순한 실수일 뿐이다
24.5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없다”
[2023.3.21일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 발언 중]

“그렇게 일하는 것(주 60시간 이상 노동)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2023.3.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발언중]

잘 모름
11.2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64.3

10명 중 6명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 응답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국정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란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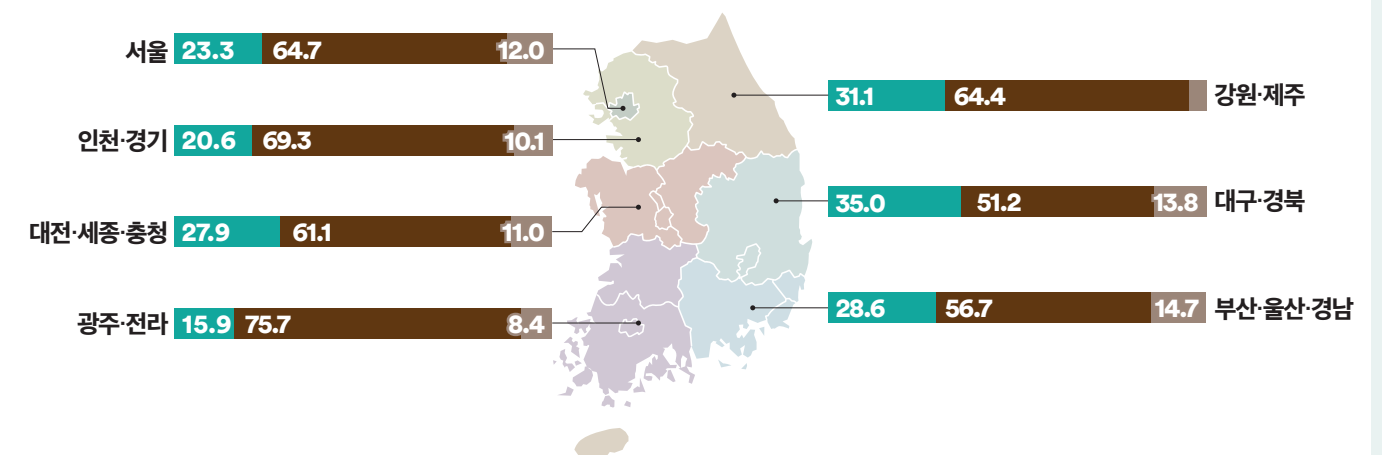
연령

18-29세	24.7	64.7	10.6
18-29 남성	38.7	51.5	9.8
18-29 여성	9.7	79.0	11.4
30대	14.5	78.6	6.9
40대	14.5	82.4	
50대	23.9	70.8	5.3
60대	37.7	49.5	12.9
70세 이상	33.2	33.1	33.7

이념성향

진보	12.5	85.7	
중도	17.2	76.6	6.2
보수	49.3	37.3	13.5
잘 모름	18.1	46.0	35.9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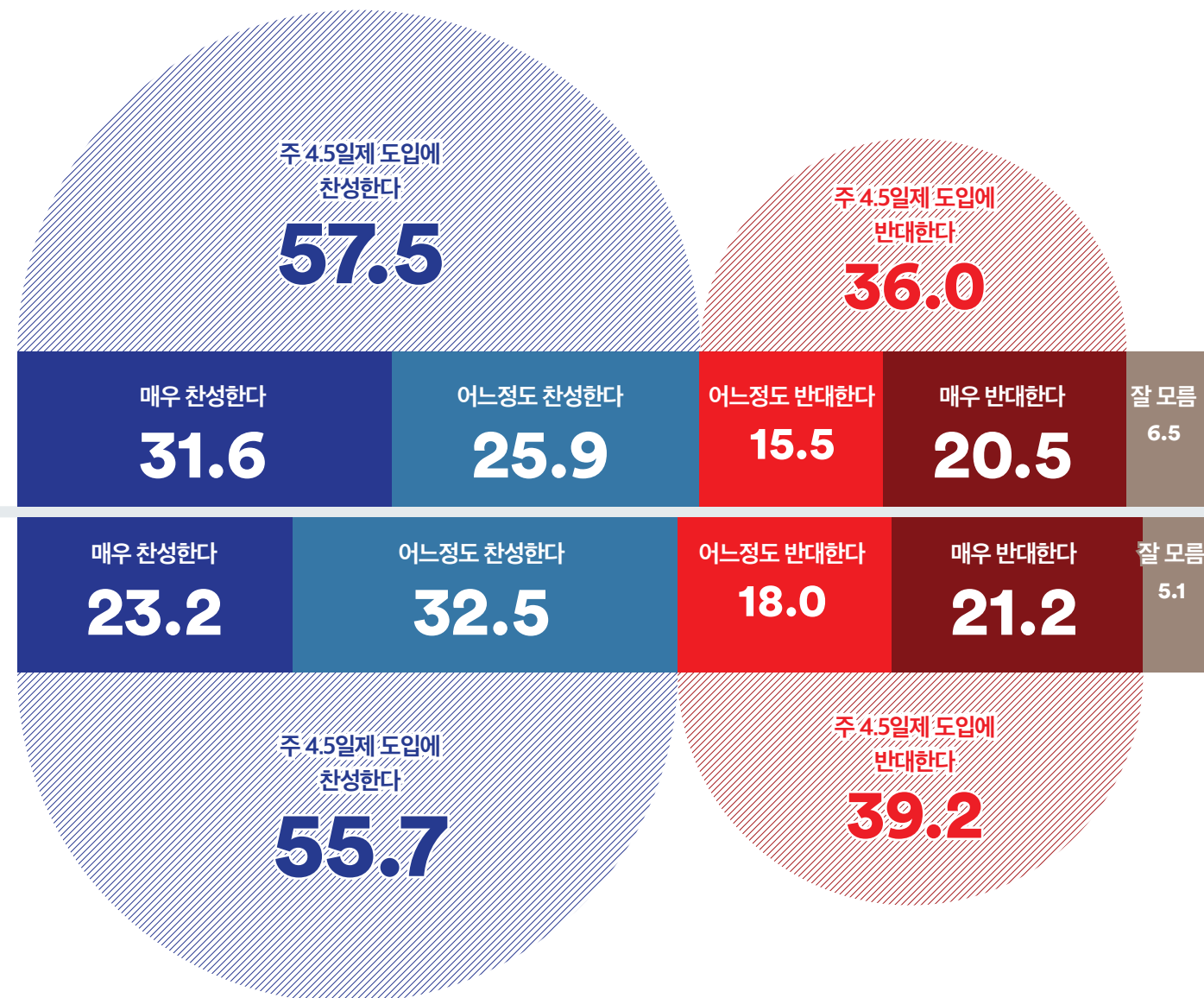
단순한 실수 국정운영의 난맥상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주 4.5일제 도입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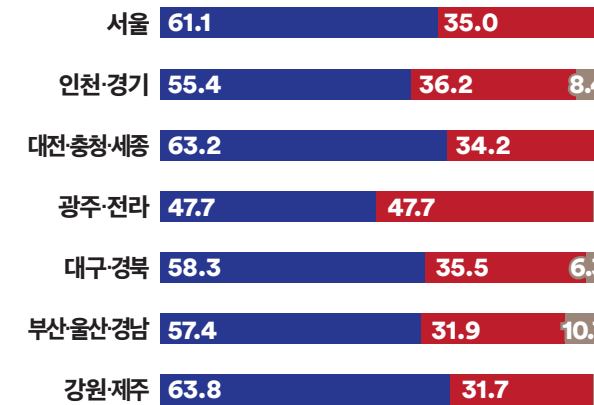
Q. 법정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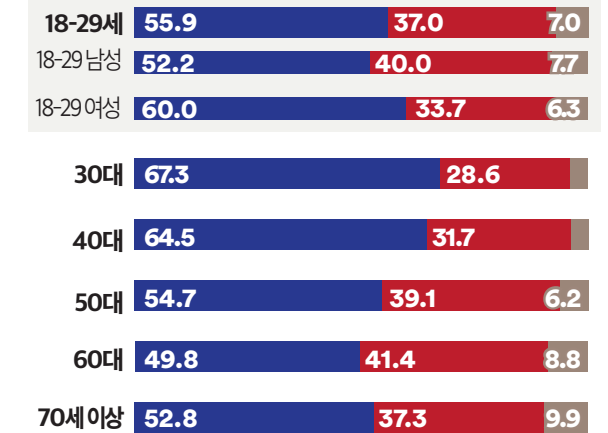


ARS: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앞섰으며,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찬성’ 응답 우세
 CATI: 4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찬성’ 응답, 70세 이상은 ‘반대’ 응답 우세. 60대는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응답이 소폭 앞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더 많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의견이 더 많음
 중도층과 무당층은 10명 중 5명 이상이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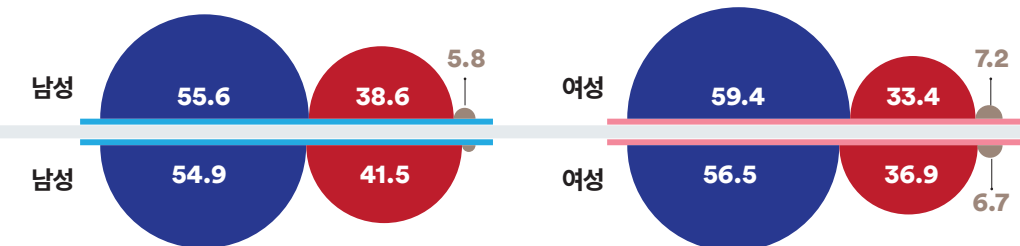
지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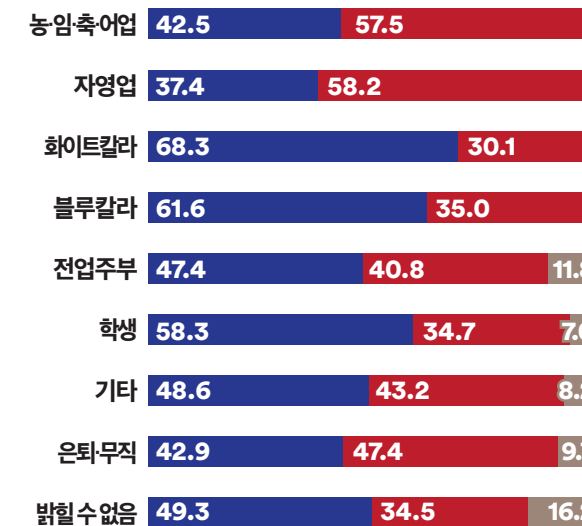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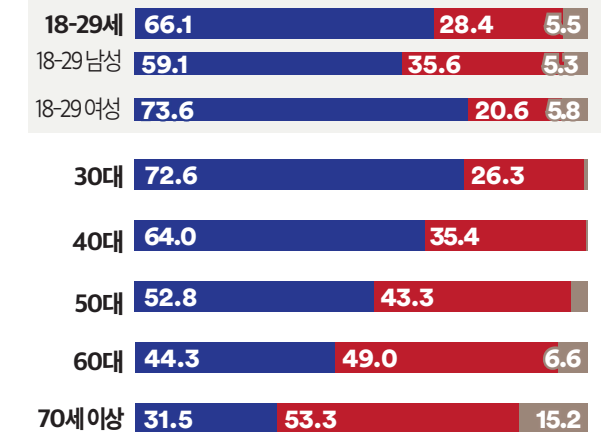
성별



직업



연령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모르겠다



REPORT #202303_05

여론조사꽃 제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꽃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